

# ‘北 비핵화’ 토대 한반도 평화 위한 2개월 대장정

文 대통령, H아베·트럼프와 통화 남북·북미 등 4~5월 릴레이 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에 뜻 모으고 북미회담 전 트럼프와 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6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북한 비핵화’를 토대로 세계 평화를 향한 대장정이 4~5월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진다.

남북이 4월 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확정했고, 북미정상회담도 5월 중 열기로 한 가운데 두 일정을 전후해 한·미·한·일, 한·중·일 정상회담 등도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의 빠른 진전으로 한반도에 봄이 찾아오면서 일본도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북일 정상회담도 배제할 수 없다.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놓고 주변 강국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 물려들고 있는 것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베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상

간 ‘만남’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통화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빠른 시기에 일본을 방문키로 하고 날짜 등 실무 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선언’을 언급했다.

‘조일평양선언’으로도 불리는 평양선언은 고이즈미 총리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일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으

로 일본이 아시아의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남·북 또는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패싱’ 우려를 제기했던 일본이 총리의 입으로 ‘북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일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어 이참에 국내 현안도 꼬집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일 양 정상도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일본을 찾은 서훈 국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에 이룩한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향후 북일 관계에서도 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중국 베이징으로 날라가 지난 12일 저녁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정외청 차관 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민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시주석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중·일 정상이 어떤식으로든 4~5월 중 한 자리에서 만날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가급적 한미 간 핵심

의제를 갖고 실무형으로라도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물론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간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아 한미 정상이 실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장소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판문점이 실제 장소로 최종 결정될 경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좋다. 우리가 (북미회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이다. 이 일정이 잡혀야 한미, 한일, 한중 등의 정상회담 스케줄을 어떻게 배치할 지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베트남을,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아랍에미리트(UAE)를 각각 방문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與 “6·13과 동시투표” 野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시기 ‘이전차’

대통령 4년중임제 등 핵심안도 이견 21일 발의... 합의안 도출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민주당 개헌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개헌을 앞둔 국회 차원의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강조하며 야당의 합의안 도출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 개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또한 이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정부형태)를 두고도 여야는 각각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며 최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현실적 개헌’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정부 개헌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더욱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은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공약으로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를 제시했으며, 오히려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는 지난 ‘촛불정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

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개헌을 위해 필요한 투표율 50%를 장담할 수 없어 이번 시기를 놓칠 경우 사실상 개헌이 불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동시 투표가 이뤄질 경우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문힐 수 있다는 우려하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초안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야당 책임론’ 역풍을 우려해 자유한국당은 19·20일 중으로 자체 개헌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을 6월 발의한다는 로드맵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적으로도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에서는 자체 개헌안을 통해 정부·여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분권형 대

통령·책임총리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투표에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개헌안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의 일부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가능성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12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처럼 합의안 도출 방향이 아닌 대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실질적인 개헌보다 지방선거를 염두한 ‘명분싸기’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 여야, 6·13 인재영입·공천심사에 속도

자유한국, 부산 등 5곳 초고속 공천 바른미래, 이번주 인재영입 1호 입당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인재영입과 공천심사 등에 한층 속도를 내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창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추진 등 정개편이 이뤄지면서 이들이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초고속 전략공천’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중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현 시장,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현 시장,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현 시장, 충북지사 후보 박경국 전 안행정부 차관, 제주지사 후보 김방훈 전 제주 정부부지사 등 5곳의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게다가 최근 영입한 김환영 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각각 충남 천안갑·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에 임명하며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 선거의 사실상의 전략공천도 진행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의 키워드를 ‘서민’·‘중산층’으로 잡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18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예비후보

자 홍보매뉴얼’에는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들의 홍보현수막·명함·선거운동 의상 등에 서민과 중산층이란 키워드를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재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부터 연이은 외부 인재영입 발표를 통해 지방선거 분위기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16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일선에 복귀한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주 중 ‘인재영입 1호’ 인사 입당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1주일에 2·3차례 영입 인재 입당식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 기자

# 산업부 ‘철강관세 제외’ 대책 찾기 총력

김현종 등 협상단, 美 협상 진행

이달 2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시행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종료된 3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이슈별 실질적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만큼 향후 정부가 한미FTA와 관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묘책’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위해 지난 13일 출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단은 오는

23일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에 남아 설득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3차 개정협상을 마친 한미FTA 협상단은 계속 미국에 남아 협상을 진행한다. 그동안 약 한 달 간격으로 진행한 한미FTA 협상을 바로 이어서 하는 이유는 두 협상이 연계되면서 서둘러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FTA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23일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한미FTA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